



인공지능 인재 채용에 몰린 구직자들 광주형 인공지능(A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채용설명회가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인공지능 산업에 관심있는 구직자들이 관련 업체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갈등의 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개발 15년 ... 공익성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광주시, 7월에 4차 공모 방침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접점산중이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익성은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남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시는 상업지역을 늘려서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앞선 사업자들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와의 법적다툼은 광주시 계약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질의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발업체 수익성 확보 vs 상권 침해=시는 지난 10일 어등산 대책위 등 어등산 관련 상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어등산 관광단지 4차 공모 의견을 주고받았다.

시는 이날 상가면적을 기존 2만4170㎡의 두 배인 4만8340㎡로 상향하는 대신 상가면적을 최소로 제한하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계획을 내놨다. 대책위는 지역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는 "의류 업종에 대해서 기존 면적으로 한정된 만큼 상권침해를 제한할 것"이라며 "지역상권에 보탬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7월께 공모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상인·시민단체 의견과는 별개로, 광주시민 중 상당수는 오히려 면적을 추가로 확대해 인구 15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내놓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어등산 상업면적을 기존보다 두 배인 4만8340㎡로 늘린다고 해도, 인기가구 판매점인 이케아 한 곳조차 들어서기 힘들다. 이케아 기흥점은 영업면적만 4만9808㎡에 이른다.

◇강요에 의한 48억 납부 vs 강요사실 없어=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현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진측이 제기한 재판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내놓은 유가증권 48억원이 광주시의 강요에 의한 것이냐와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통보 시 처분 관련 사전통지 절차를 미행한 점 등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지다.

서진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와 의견조율이 잘되고 있었는데, 광주시가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의 유가증권 제출을 조정하는 등 강압적인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광주시가 직접 협상 대상자로 나서달라고 요구한 뒤 담판을 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진건설은 또 사업자금 확보 우려가 있었다는 광주시 지적과 관련해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483억원(전체 사업비 10%)은 광주은행을 통해 확보한 단계였으며, 전체 사업비도 하나은행에서 단적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약서(LOC)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관련 자료는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48억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나 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공공기관 신설 땀 지방에 우선 설립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11명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미 설립된 기관 지방 이전시책 적극 추진 "2차 이전 땀 금융공기업·국책은행 포함을"

정부 공공기관 신설 시 지방에 우선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이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수도권에 신설되거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기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이전 시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이같은 '국토 균형 발전'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 공기업을 비롯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송갑석(광주 서구갑) 등 11명의 여당 의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63개 정부 공공기관 중 43%에 해당하는 수도권 소재 157개 기관과 추후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기관의 지방 이전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법(제18조 1항)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다소 막연하게 규정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공공기관 부속 연구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원 광주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도권 소재 정부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이라며 "최근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정신을 염두에 두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법의 정신과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금융공기업·국책은행·연구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이반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공기업·국책은행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가 국회에서 최근 개최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농협·산업은행 등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이 적으면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이날 "정부가 제대로 된 국토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이 명분과 대의를 갖고 있어 국회 분회의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법률안 통과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이 늘게 돼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총선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둔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하는 국회법' 제정, 북한 이슈 등 우선 현안이 조금 가려진 것일 뿐, 신중을 기해 애초 계획대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도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지 않기 위해 준비 작업에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지가 약해졌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경두 국방, "北 군사도발하면 좌고우면 않고 강력 대응"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가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 축사에서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yonhapnews.co.kr

한 해의 뉴스·시사 자료가 한권에... '연합연감 2020'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20년판이 6월 8일 출간됐습니다. 14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올해 연감은 2019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분야별 주요 뉴스를 사진과 함께 기록했으며, 각종 통계와 도표 등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핵심뉴스로 뽑은 '조정'으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논란, 강제징용 판결에 이은 한·일 갈등 고조, 패스트트랙 1년 대치 끝에 공수처법·선거법 통과, 배일 벗은 연쇄살인범 이춘재 등을 다뤘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세계 영화제 석권과 스포츠 '한류' 류현진, 손흥민, 박항서, 고진영 등의 활약상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는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또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요약, 정리했으며 국내외 및 북한의 주요 뉴스를 화보로 묶었습니다. 각종 현행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연적·인구·언어 등 개요를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선 국내 및 세계 통계,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 기획기사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 명단도 게재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으로 이뤄진 북중·북러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참조해 분석,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시·도 지리와 김정은 신년사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연설 및 각종 담화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북한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을 소개해 자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1981년부터 연감 제작을 시작해 올해로 통권 40권을 발간했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84쪽
- 가격 : 18만원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8-2222 경기북·강원(031)569-7788 인천(032)441-2007 대전·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경남(055)28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